

공공기관의 구분회계 제도 도입

회계구분 단위 결정 문제를 중심으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딜로이트 컨설팅

Presented by
조용호 상무

공공기관 부채, 무엇이 문제인가?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2012년에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긴 했으나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가 신용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은 보금자리사업·4대강 사업 등의 정책사업추진, 발전소건설·송배전망투자·자원개발 등 에너지관련 공공기관의 국내외 시설투자 확대, 공공요금 인상억제 및 저축은행 부실로 인한 위기관리비용 등을 들 수 있다.

연도별 공공부문 부채 현황

(단위: 조원, %)

공공기관 재무현황, 295개 공공기관 대상



2012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총 부채는 493조원으로 국가채무 대비 110% 수준에 달한다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공기업	200.8	238.7	292.0	329.1	353.7
준정부기관	81.0	88.8	96.1	120.2	129.6
기타공공기관	8.2	9.3	8.9	9.7	10.2
공공기관 부채 총계	290.0	336.8	397.0	459.0	493.4
국가채무	309.0	359.6	392.2	420.5	443.7
(국가채무 대비 비율)	93.9	93.7	101.2	109.2	111.2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장치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민경제 전체의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①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통한 부채 총량관리, ②부채감축계획 이행점검 강화, ③리스크 관리 필요기관에 대한 별도 대책마련 및 ④구분회계제도·사후심층평가제도 등 추가적 제도장치 마련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부채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기관 구분 회계 도입범위 확대

공공기관 부채를 발생
원인 별로 분석한 구분
회계 제도 도입지침이
확정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 중 하나인 공공기관의 구분회계 제도 도입은 공공기관 부채를 발생 원인 별로 분석하여 부채의 책임성·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구분회계제도 시범도입 공공기관이 구분회계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이 결과에 근거하여 내년에 도입범위를 확대하는 일정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다.

또한 세부적인 구분회계 제도의 내용인 회계구분 단위 결정, 자산·부채·손익 귀속/배분방법, 내부거래가격 결정, 사내차입금제도 도입여부, 자회사 재무정보 제공수준 과 관련해서도 시범도입 공공기관의 구분회계제도 설계·실행 결과를 평가하여 올해 연말까지 구분회계 도입지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회계구분 단위 결정

공공기관의 구분회계 도입방안과 관련하여 주요 고려사항 중 하나는 회계구분 단위 결정문제 이다.

<표1>공공기관 유형별 회계 구분 단위 (예시)

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례
공기업	법률에 규정된 사업	기능별	사업소별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프로젝트/ 서비스별	한국석유화학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노선별	한국도로공사
			사업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 사업소별		설비/서비스별	한국 남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준 정부기관		서비스별	사업소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프로젝트별	한국농어촌공사
			-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노선별		한국철도시설공단	

**구분회계 정보산출의
관점에서 회계 구분 단
위를 결정할 때 기본적
으로 3가지를 고려해
야 한다**

구분회계는 ‘특정 실체에 속한 사업·조직 등의 단위 별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재무정보 산출체계’ 로 정의될 수 있다. 이때 위에 정의된 바와 같이 회계구분 단위는 각 공공기관의 사업이나 조직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법률에 규정된 사업·조직 특성을 반영하여 회계구분 단위를 구분한 예시적 분류체계는 위의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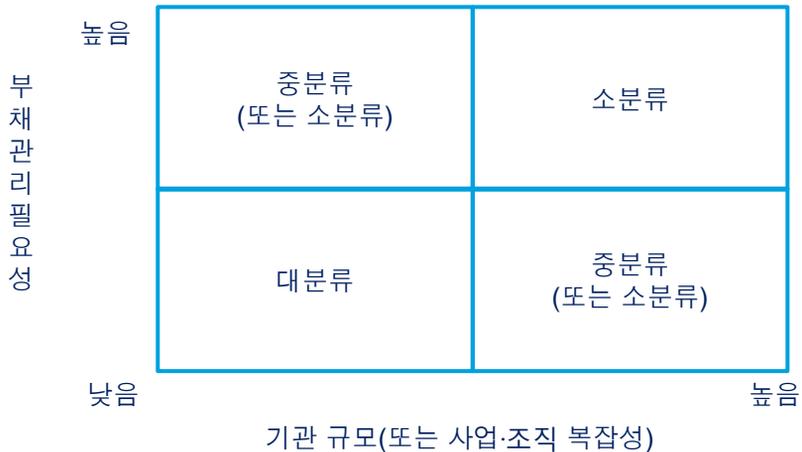
개별 공공기관의 규모 또는 사업·조직 특성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인 기준으로 회계구분 단위를 결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구분회계 정보산출의 편익·비용 관점에서 회계구분 단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①기관규모 또는 사업의 복잡성, ②구분회계 도입목적 부합성, ③비교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회계구분 단위를 위의 표에 있는 소분류 기준으로 세분하면 필요 정보량이 많아지면서 정보산출 비용은 증가하지만 부채관리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편익 등의 긍정적인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기관의 규모가 크고 사업·조직이 복잡할수록 절대적인 정보산출 비용은 크겠지만 이러한 기관의 경우 사업관리 및 회계인프라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므로 상대적인 정보산출 비용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공공기관 구분회계 도입의 목적인 공공기관 부채관리 측면 또한 편익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비교가능성은 규모나 사업특성에서 유사한 공공기관들의 성과를 비교함에 있어서 구분회계에 따른 정보가치를 높여준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 공공기관의 회계구분 단위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래의 2X2 matrix를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기관규모(또는 사업·조직 복잡성)와 부채관리 필요성 강도를 기준으로 회계구분 Level(대/중/소)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의 회계 구분
단위 세분화에 따라
운영효율성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교차보조
이슈 등의 사회적 문제
제거가 제기될 수
도 있다.

공공기관의 회계구분 단위를 세분화할 경우 부채발생 원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내부 사업·조직 단위에 대한 성과관리 측면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 공공기관 산하에 동일 사업을 수행하는 두 개 이상의 지역본부 간의 손익비교 및 자산효율성 등에 대한 정보가 산출된다면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회계구분 단위 세분화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사업간 또는 지역간의 교차보조 이슈가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익성이 높은 A사업(또는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을 공공성 목적에 따른 B사업(또는 지역)의 손실보전 목적으로 충당할 경우 A사업(또는 지역)의 수요자는 수익자 부담원칙 강화 및 교차보조 축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전력이나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사업의 경우 지역별 원가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전국 동일요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차등요금제에 대한 요구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정보공개에 따른 편익·비용 분석이 별도로 있어야 할 것이나, 세분화된 구분회계 정보공개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Deloitte.